

#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금 재 호\*

## I.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

한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일자리 부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있으며,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의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 ↔ 고용 ↔ 분배의 선순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성장이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분배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하여도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흔히 발견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 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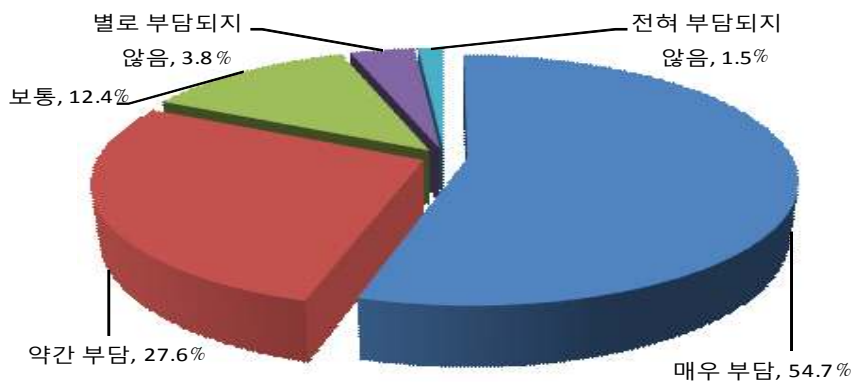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준비로 인해 노후를 위한 투자나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최연자주소현, 2011). 즉, 대학생의 높은 등록금은 이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나이는 평균 52.3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403.3만 원으로 대학생이 없는 가구의 280.5만 원보다 42.8%나 많았다. 그러나 높은 가구소득에도 불구하고 [그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럼 1]과 같이 응답자의 54.7%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부담 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은 5.3%에 불과하였다.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중장년층의 빈곤위험성을 높이고, 이는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학등록금의 지원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대비 재원을 늘림으로써 미래의 빈곤위험성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고령자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림 1] 대학생 교육비의 부담 정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등록금을 개인 부담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인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모아진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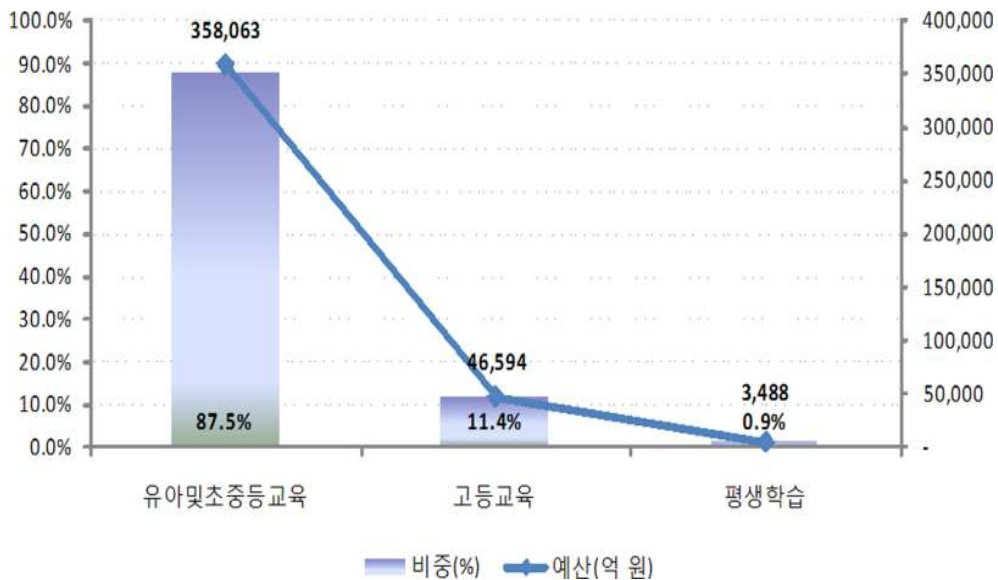
향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하고 조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세금 증가 없이는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는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 II. 대학등록금의 추계

### 1.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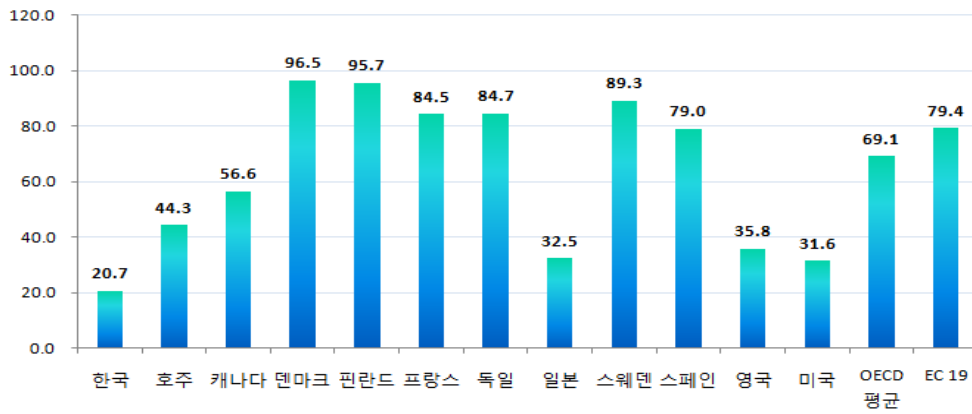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2011년의 경우 교육예산 401,496억 원의 11.4%만이 대학교육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예산도 0.9%에 불과하며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그림 2] 교육 분야별 예산규모와 교육예산 중 비중: 2011년 정부예산안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은 OECD국가 중 칠레(14.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20.7%에 불과하다. 대학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은 [그림 3]과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80% 이상이며 OECD 평균은 6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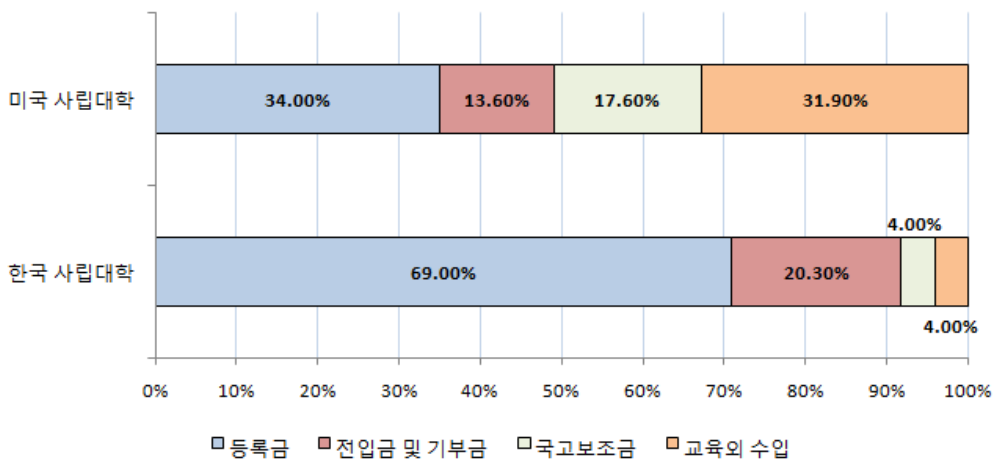
[그림 3]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교육비 중 정부부담의 비중: 2007년



자료: OECD(2010), 『2010 OECD 교육지표』.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적은 것이 일견 당연하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낮아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재정수입의 대부분인 69.0%를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34.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비중도 미국이 17.6%인 반면, 한국은 4.0%에 불과하다.

[그림 4] 한국대학과 미국대학의 재정수입 구성비(2005년)



[그림 5] 2010년도 장학금 및 학비감면 규모(입학금 지원 제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 교육통계연보』.

그리고 장학금이나 학비감면(근로장학금 포함) 등의 형태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011년 등록금의 20% 수준으로 추정되어 전체 등록금의 80%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은 입학금을 제외하였을 때 23,81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대학등록금의 추계

2010년 각종 대학교육 기관에 재적하고 있었던 학생은 3,327,525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32.7%가 휴학을 함에 따라 실제 학업에 참여한 학생은 2,240,651명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리고 2010년도 재학생 수에 19~22세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2011년도의 대학 재학생 수를 추산하면 약 2,301천 명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각 대학이 보고한 등록금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의 등록금 총액을 추정하면 <표 1>과 같이 약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금 중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이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등록금은 21.8%이다. 대학 유형별로 연간 등록금을 살펴보면, 사립대학교가 연간 7,690천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산업대와 사립전문대가 따르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국·공립 전문대의 등록금은 연간 300만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 등록금의 규모는 추정방식과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계산된 값은 정부의 공식적 등록금 총액이 아니며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

〈표 1〉 고등교육학교 형태별 재학생 규모(2010년)와 등록금(2011년) 추계

		2010년 기준		2011년 기준		
		재적학생(명)	휴학률(%)	재학생(명)	연 등록금(천 원)	총등록금 규모(억 원)
대학교	사립(152)	1,600,668	31.4	1,098,123	7,690	86,732
	국·공립(27)	428,173		293,744	4,490	13,546
	소계(179)	2,028,841		1,391,867		100,278
전문대학	사립(136)	745,614	35.6	480,189	6,098	30,075
	국·공립(9)	21,473		13,829	2,816	400
	소계(145)	767,087		494,018		30,475
교육대학(10)		21,618	3.1	20,948	3,288	707
기타	방통대(1)	272,452	34.4	178,688	351	644
	산업대(11)	133,736	34.8	87,251	6,647	5,957
	사이버대 외(25)	103,791	34.6	67,879	2,573	1,794
	소계(37)	509,979	34.5	333,818		8,395
전 체(361)		3,327,525	32.7	2,240,651		139,854

주: 1) ( ) 안의 숫자는 학교 수이며, '사이버대 외'에는 기술대학(1), 각종 학교(3), 원격대학(3), 사내대학(2), 사이버대학(16)이 포함됨.

2) 2011년의 재학생 규모는 19~22세 인구증가율(2.7%)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함. 즉, 2011년의 재학생 수는 2,301,314 명임(=2,240,651×1.02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서비스」; 한국교육개발원(2011), 「대학알리미」.

〈표 2〉 대학등록금의 추정치와 실질GDP 대비 비중: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경제 성장률(%)	실질GDP (10억 원)	대학 재학생 규모(천 명)	재학생 변동률(%)	대학등록금 (억 원)	실질GDP 대비 비중(%)
2010	6.2	1,172,803	2,241			
2011	4.5	1,225,579	2,301	2.71	139,854	1.14
2012	4.8	1,284,407	2,368	2.90	150,811	1.17
2013	4.7	1,344,774	2,422	2.27	161,484	1.20
2014	4.6	1,406,634	2,445	0.97	170,556	1.21
2015	4.5	1,469,932	2,434	-0.46	177,404	1.21
2016	4.2	1,531,669	2,393	-1.68	181,750	1.19
2017	3.9	1,591,404	2,330	-2.63	183,870	1.16
2018	3.6	1,648,695	2,256	-3.18	184,439	1.12
2019	3.3	1,703,102	2,196	-2.66	185,450	1.09
2020	3.0	1,754,195	2,128	-3.10	185,096	1.06
2021	2.8	1,803,312	2,029	-4.65	181,426	1.01
2022	2.7	1,852,002	1,916	-5.59	175,907	0.95
2023	2.6	1,900,154	1,789	-6.60	168,571	0.89
2024	2.5	1,947,658	1,666	-6.86	160,938	0.83
2025	2.4	1,994,402	1,588	-4.70	157,050	0.79
2026	2.4	2,042,267	1,548	-2.54	156,740	0.77
2027	2.3	2,089,239	1,518	-1.90	157,296	0.75
2028	2.2	2,135,203	1,509	-0.59	159,808	0.75
2029	2.2	2,182,177	1,506	-0.25	162,910	0.75
2030	2.1	2,228,003	1,491	-0.94	164,767	0.74

주: 실질경제성장률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치를 사용하였음.

대학등록금 추계의 가정

- 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9~22세 인구나 동일한 비율로 변화
- ② 대학등록금은 실질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상승
- ③ 2010년도의 고등교육기관별 학생 수의 분포는 2030년까지 변동 없이 일정

다음 단계로 대학등록금의 규모를 전망하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경제성장률만큼 등록금이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하여도 대학 재학생의 절대적 감소로 인해 등록금 규모는 2011~2030년 사이 17.8%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학생의 감소에 따라 실질GDP 대비 대학등록금의 비중도 2011년의 1.14%에서 일시 상승한 뒤 2016년부터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0.74%에 불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등록금의 전체 규모는 2019년에 18조 5,450억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III. 대학등록금의 지원 방법

#### 1. 대학등록금의 지원 방법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이다.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약해질 것이고 이에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폭을 가능한 한 높이려는 동기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밀도 있는 평가 및 심사가 요구된다. 대학 스스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등록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모범적 사례로 인용될 수 있다. FAFSA는 가구소득, 가구 내 대학생 수, 자산규모 등 가정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FAFSA와 유사한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비 지원만 받고 공부는 등한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성적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등록금 지원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도 중요한 이슈이다. 등록금 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정부재정에 미치는 주름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등록금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되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표 2>와 같이 대학 재학생의 감소로 인해 지원율을 높이더라도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 대학등록금 지원의 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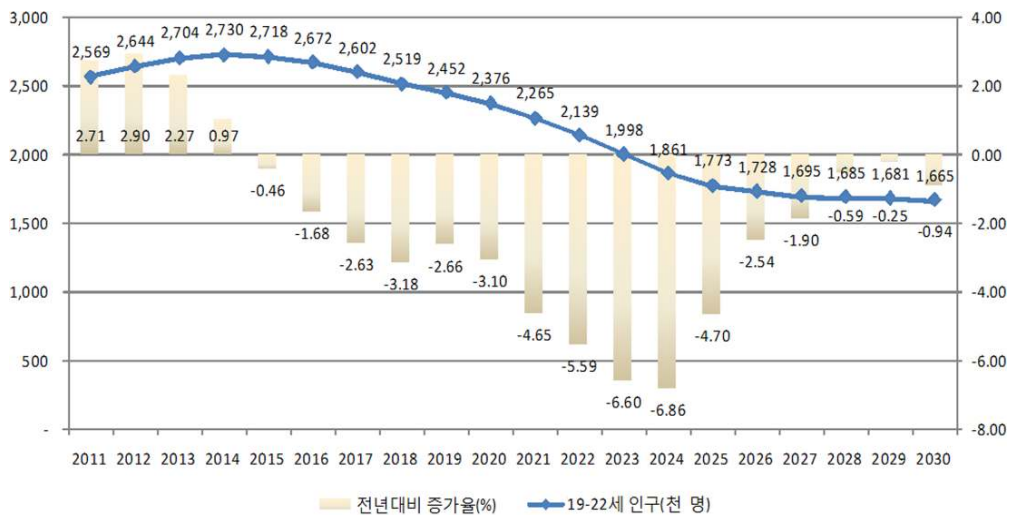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가수요 및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다. 즉,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더욱 높아지고, 대학에서의 재학기간이 늘어날 위험성이다. 실제로도 대학교육이 무상인 핀란드에서는 20대의 절반가량이 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양성 및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해질수록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에 대해 계속 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학사관리 및 대학평가가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대학학과평가를 통해 등록금 무상지원에 따른 교육 가수요 및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기간은 정규교육기간(대학교 4년, 전문대는 2~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졸업을 늦추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진로교육, 직업교육의 강화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고용복지연계의 통합적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이 늦추어지지 않을까

[그림 6] 19~22세 청소년의 인구 규모와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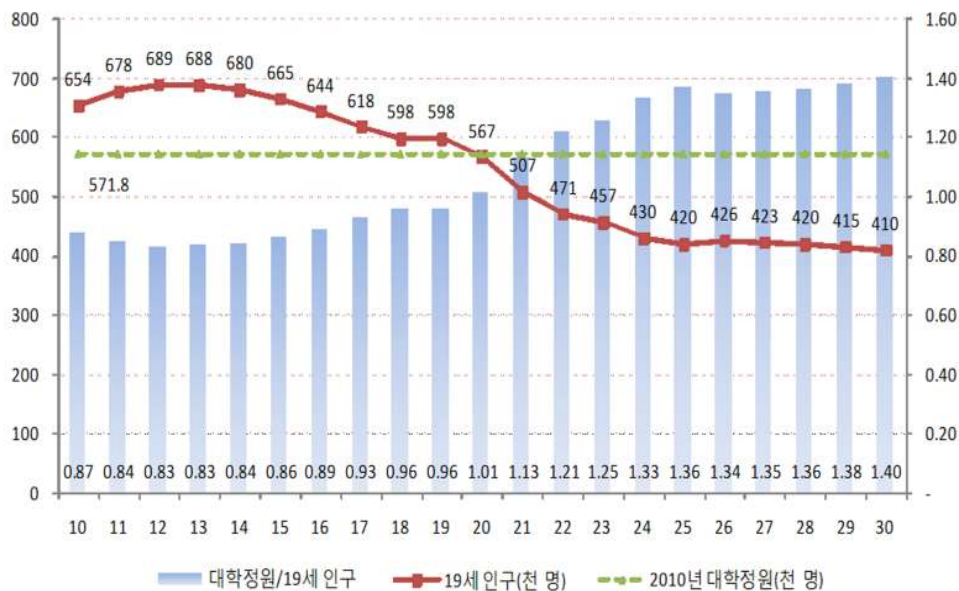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하는 걱정이다. 대학교육의 적령기로 볼 수 있는 19~22세 인구는 [그림 6]처럼 14년 뒤인 2025년에는 현재보다 1/3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학생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대학등록금 규모의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등록금 지원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2010년의 대학 입학정원은 561.8천 명으로 이러한 정원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부터는 19~22세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낮아지게 된다. 2010년의 대학진학률이 79.0%였던 것을 고려할 때 지금도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보다 입학정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부족이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림 7] 2010년도 대학정원(대학교+전문대+교육대+산업대)과 19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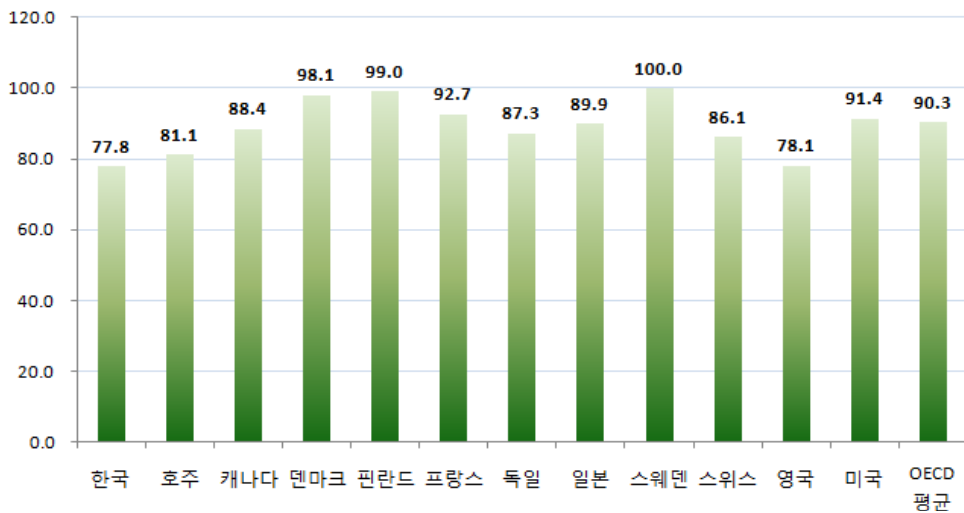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 교육통계연보』.

대학의 부실위험도에 따라 등록금 지원 여부 및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부실한 4년제 대학교의 직업전문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부실교육기관의 판단 기준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인증 획득 여부, △대학 경영의 투명성, △전임교원 확보율(학생 1인당 전임교원 비율), △대학의 재무상태, △졸업생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 △전임교원의 역량 및 수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IV.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대학등록금의 지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이다.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의 비중이 OECD국가들 중 칠레(7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지만 한국은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8] OECD 주요국의 초·중등교육 교육비 중 정부부담의 비중: 2007년



자료: OECD(2010), 『2010 OECD 교육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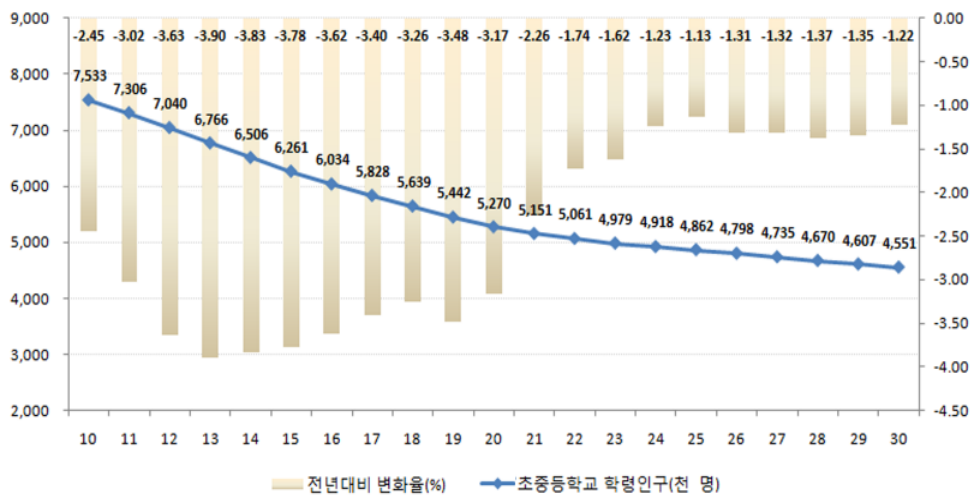
2011년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계층부터 단계별로 수업료를 지원하여 2020년대에는 전면적 의무교육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감소에 기인하여 GDP의 0.08~0.10%의 범주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 V. 재원조달

대학등록금 지원과 고등학교 의무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유예 등이 논의되었으나 이 외에도 유아 및 초·중등학교 학생의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의 절감도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 인구와 마찬가지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적령기 인구도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와 같이 2010년 7,533천 명에 달하였던 초·중등학교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2030년에는 4,551천 명(39.6%)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대학등록금 지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재원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감소이다. 대학등록금 및 고등학교 학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소득세 세입을 증가시킨다. 2010년 기준 고등학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 원이고 대학생 교육비의

[그림 9]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규모와 변화율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2)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교육예산의 GDP 비중은 2012년 0.29%에서 출발하여 2016년 0.38%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낮아져 2030년에는 0.26%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여러 가지의 가정과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과만을 보고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 900만 원이다. 『201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따른 조세지원액은 1.23조 원(2009년), 1.28조 원(2010년), 1.38조 원(2011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소득세 감면액의 상당금액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육투자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교육예산 지출의 효율화·합리화 노력을 통해 절약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교육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학생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합리화하여 대학등록금 지원에 따른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VI. 기대효과

대학등록금 지원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잠재능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역진적 소득세제의 개선효과이다.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과중한 교육비를 개인이 그대로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 예로 아래의 고소득자 A씨와 같이 대학생 자녀에 대해 똑같이 연간 등록금 80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80만 원 받아 실제로는 520만 원만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 면제 대상인 B씨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록금 800만 원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및 대학등록금의 정부지원은 이러한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사례 : 대학등록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지출하는 고소득자 A씨와 면제자 B씨〉

	등록금	소득공제액	한계득세율	소득세 감면액	순(純) 부담액
고소득자 A씨	800만 원	800만 원	35%	280만 원	520만 원
소득세 면제자 B씨	800만 원	0원		0원	800만 원

셋째, 대학등록금 지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여 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특히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가계의 여력을 증가시켜 미래의 복지부담을 완화하는, 즉 고령화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를 완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득 양극화 및 부의 세습을 완화할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진작의 효과도 기대된다.

넷째,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등록금 무상지원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래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합리적 양성과 배분에 공헌한다. 마지막으로 부실위험도 및 교육의 질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IU**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0 교육통계연보』

\_\_\_\_\_,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최연자주소현(2011),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삶: 오늘과 내일」, 『2011 한국인구학회 전 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인구학회.

한국교육개발원(2011), 「대학알리미」.

한국노동연구원(2009), 『제11차 한국노동패널조사』.

OECD(2010), 『2010 OECD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번역.